

통합 광주·전남…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기대감

정부, 2차 이전기관 상반기 확정…“통합특별시 우선 고려”

내년 이전 시작…시·도, 30여개 목표 공동 대응체계 구축

정부가 행정통합 광역지자체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를 공식화 하면서 통합이 추진 중인 광주·전남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재정, 통합특별시(가칭) 위상 강화,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과 함께 공공기관 우선 이전 방안을 담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누기식 배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 지역에는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에 착수하는데, 이전 대상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에 따라 통합시 광주·전남이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추진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유치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협력하고 있다.

시도는 지역 전략 산업인 AI(인공지능), 에너지, 농수산, 문화 등 분야를 중심으로 30여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는 한전 인제개발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한국메이터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AI·문화·사회서비스 기관을 중점으로 보고 있다.

전남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농어민 지원 기관과 한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대한체육회 등의 이전도 추진 중이다.

이미 전남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나주 유치가 확정된 인공대양(핵융합) 연구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한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수준을 어디까지 범위를 잡을 것인가에 따라 시도 요구는 달라지는데, (행정통합 특별법에 공공기관) 우대 조항을 담고 정부의 생각을 파악해 이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가 이미 이전에 온다면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광남일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획기적 지원, 미래 향한 출발점”

강기정 시장 “지역경제 활력 등 기대”

김영록 지사 “4년 후에도 지원 건의”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하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과 서울특별시에서 준하는 위상 강화 등의 인센티브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정부 발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광주

·전남이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1월 2일 민주의를 앞두고 통합을 선언한 이후 불과 14일 만에 정부가 빠르게 화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시민 의견 수렴과 국회 입법으로, 정부·국회와 상시 협력해 통합을 완성하고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 규모와 관련해선 “예산 25조원 규모의 특별시 탄생을 예고하는 것으로, 서울·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재정 규모”라며 “통합특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지원과 특별시 위상, 공공기관 이전, 산업 지원 인센티브 등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문 하나하나로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4년간 20조원이 지원되면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미래를 향해 힘 있게 출발할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통합교부세나 통합지원금이 어떤 세목에서 마련될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일부를

재원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며 “4년 이후에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관련해선 “서울시에 준하는 체계로 부단체장 4명을 두고 차관급 정부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외부 전문가를 폭넓게 영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가 이미 이전에 온다면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특별시장 ‘깜깜이 선거’ 우려 해소

선관위 “단체장 적합도·선호도 여론조사 가능”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 탄생할 광주전남특별시를 이괄 초대 특별시장을 둘러싼 ‘깜깜이 선거’ 우려가 해소됐다.

18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제1호 광주전남특별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특별시장 후보자에 대한 단체장 적합도,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허용되게 됐다.

그간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통합특별시장 후보

자 여론조사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선거구 확정도 이뤄지지 않아서다.

때문에 여론조사가 불투명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됐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 특별시장 관련 여론조사 가능 여부를 검토한 끝에 세부 지침을 아끼지 않을 경우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원내대표

원내대표 출신 종진…“정무기능 공백 없도록 협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임명됐다. 홍 전 원내대표는 오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홍 전 원내대표가 합류한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낸

3선 중진이다. 원내대표 시절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 현안을 조율하며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정책 전문성과 여야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국회 간 교역 역할을 맡길 적임자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반영된 인사로 해석된다.

이 수석은 홍 전 원내대표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풀어가 한다는 신념 아래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꾸준히 실천해 온 인물”이라며 “청와대는 정무 기능의 공백 없이 협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상호 수석은 사직 후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직은 지방선거를 앞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른바 ‘원조 친명(친이재명) 7인회’ 출신인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가

능성이 거론된다.

후임 정무비서관으로는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 고용진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이 수석은 “아직 확정됐다고 밝히기 어렵다”며 “정무수석실 인력의 동시 이탈은 기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선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다수의 비서관·행정관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과 맞물려 강준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청 차출론, 김윤범 정책실장의 호남 차출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통합특별시’서 계속

정부가 재정·권한·산업 측면에서 파격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광주·전남은 연간 예산 25조원 규모의 재정력을 갖춘 국내 빅3 광역단체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 발표가 현실화하면, 광주 7조7000억원, 전남 11조7000억원을 더해 예산 규모 25조원에 이르는 ‘광주전남특별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이는 서울·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로, 광주전남특별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4년간 20조를 지원하면 통합시가 새롭게 자리 잡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 통합시가 멋지게 출발할 수 있다”며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지역난방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와 등 공공기관이 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전남이 예산 25조원 규모의 ‘슈퍼 지지체’로 연차 특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의 지속가능성과 불이익 배제, 재원 조달 방식 담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잖다.

시·도 관계자는 “이제는 입법 타임”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기대와 우려,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담아내 최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대원칙 중 하나는 불이익 배제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해병’ 2차 특검 국회 통과

최장 170일간 251명 투입…‘노상원 수첩’ 등 17개 의혹 수사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여야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

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직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강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민주당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1인씩 선정해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특검보 5명, 파견감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정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5년’

게임 선포 409일만 첫 단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